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에 거는 기대감



데스크칼럼

박간재

전남취재부장
kanjae.park@jnilbo.com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막을 내렸다. 광주·전남에서 42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최종 200명이 조합장 배지를 거머 쥐었다. 투표율도 높았다. 광주 82.6%, 전남 80.9%다.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라서 다른 선거보다 상대적인 관심은 덜했다지만 여론 선거보다도 뜨겁고 치열했다. 대선과 총선, 지선에 이은 대한민국 전국 4대 선거 중 하나였기에 비중 역시 결코 작지 않다.

그 간의 조합장 선거의 역사도 깊고 사연도 많다. 군사정권 시절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임명제였지만 1988년부터 조합원들이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개선됐다. 영리사업체인데다 폐쇄적이어서 굶핍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국가주도의 조합장 선거로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에 지난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 수협의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덕분에 선거부정은 줄었지만 굶핍과 항응제공이 오가는 '돈선거'는 줄지 않았다. 전국 조합장 임기를 통일해 선관위 주관으로 동시선거를 치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1년~2014년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

을 개정해 전국 조합장 임기 종료일인 2015년 3월20일로 맞췄고 마침내 그해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됐다.

동시선거를 통해 다소 투명해 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반론도 여전히 이어졌다. "감시만 용이해졌을 뿐 돈선거는 막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후 2회 선거를 거쳐 이번 제3회 선거까지 9년이 흘렀다.

전국민의 감시와 투명경영을 외치는 조합원들 덕분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9년째 맞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개선점은 없었을까. 여전히 많다.

당장 선거가 끝나자 SNS 등엔 이번 조합장 선거를 비판하는 글들이 쉽게 눈에 띈다. "조합장 선거는 돈 많이 쓰면 당선된다는 건 아시죠?"라는 등의 비난 글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독자들은 이번 선거를 관전하다가 색다른 점을 발견했을까 하다.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 조합장이 대표적. 전남의 경우 5선, 6선에 당선된 조합장이 배출됐으며 타 지역에서는 10선에 성공한 조합장이 등장했다. 농협법상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 규정 때문이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의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임에

서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한다. 조합장 업무도 대외교류와 복지, 교육 등 금융·경제 사업 이외 부문으로 제한돼 있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해 조합원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게 애초 법 취지다.

3번 연임한 상임 조합장의 경우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폐해가 나오고 있다.

임기연장을 위해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을 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사안 역시 장단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 농장대처도 조합법 개정 지연에 한뫼하고 있다. 국회에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농촌 지역구인 여야 의원들이 표 확장력을 가진 조합장들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도 앞으로 4년간 소임을 다하며 조합원들과 전남농업을 위해 헌신하게 될 200명의 조합장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전남을 '농도 전남'이 아닌 '농촌융복합' 산업 선진지로 '부자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줬으면 한다.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각 조합을 잘 이끌어 가길 기원한다.

社說

방사능 오염수 방류 피해 최소화 나서야

日 정부 6월 방류 통보에 비상

지역 시민 단체가 9일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12주년을 앞두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부산과 경남 등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5개 자치단체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현실이 되면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나라 수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다. 하지만 핵 사고 재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내 핵 연료 파편 수백 톤은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와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녹아내린 핵 연료도 방사선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방사능의 위험성은 이미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알려졌다. 수증기나 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남을 경우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켜 DNA를 파괴시킨다. 화학적 성질이 물과 똑같아 물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아무리 희석 시키더라도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첨단공법을 사용한다는 일본의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지난 2월 후쿠시마에서 잡힌 농어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1kg 당 85.5Bq(베크렐) 검출됐다고 한다. 일본은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비용을 아끼겠다'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결정했다. 죽음의 방사능을 미래 인류에게 떠넘기는 범죄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도록 해양재판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와 전남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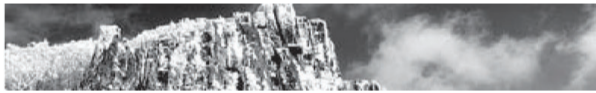
감사원, 한전공대 설립 정치 감사 안된다

본궤도 대학 경쟁력 실추 우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자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 전남도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학부지 설립 과정의 불투명성 △대학 부지를 제공한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의혹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 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현정부 출범 후 그간 감사원이 보여준 행보를 고려할 때 이번 감사는 충분히 예상됐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단체장의 반응에는 온도차가 감지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한전공

대 설립에 관련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와 관련 9일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한전공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여하튼 감사가 시작된 만큼 한전공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은 명백하게 규명돼 이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감사원이 독립성을 망각하고 '정부의 국정 도우미' 역할에 충실한다면 국익을 해치고 국가최고 감사기구로서의 신뢰감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교 2년째 치열한 경쟁률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 표적 감사로 인해 이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석대



민선 7기때 완공후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 진출로의 존폐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오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산IC 위험도 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기 때문이다. 용역 수행 기관인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빅데이터 분석, 교통 시뮬레이션 등으로 위험도를 분석한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 절차에 대해 광주시청 안팎에선 개통 불가 결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 이후 수 차례 개통 불가 의사를 밝혀온 터여서다. 만약 이날 시설 폐쇄 결정이 이뤄진다면 '답'을 정해놓은 채, 전문기관 의견 검토는 요식 행위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77억 원의 예산(설계비 6억여 원 포함)을 쏟아부어 신설된 도로가 시민들이 한 번도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 폐기처분될 운명에 처한 사례는 광주에서 처음이 아닌가싶다.

개인적으로 이 진출로 이용에 기대감이 컸던 터라 납득 불가하다. 우선은 용역 수행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다. 지난해 10월 용역 의뢰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그동안 2순환도로 운전자 주행 행태, 교통 흐름 등을 조사하고, 가상주행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각종 평가를 진행했다고 지난달 14일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밝혔다. 현재 건설된 왼쪽 진출로를 이용했을 경우, 최초 설계안인 오른쪽으로 진출로가 건설됐을 경우, 완공 당시 설치한 안전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운행했을 경우, 추가 안전구조물을 설치한 뒤 운행했을 때 등 네 가지 경우수를 고려해 비교 분석한 데이터값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이는 도로구조와 교통 현실 등을 고려해서 추정한 결과값이지 실제 상황 분석 결과는 아니다. 대개 도로의 경우 개통후 교통사고가 잦게 되면 개선에 나서게 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70개 지점을 대상으로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는 56.3%, 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밝혔다. '교통사

고 잦은 곳'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연중 5건 이상, 일반 시·군의 경우 연중 3건 이상 발생하는 지점이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이 지점들 중 270곳에 신호·과속단속 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회전교차로 개설 등의 개선 조치를 2020년 완료했다. 이후 개선 조치 전 3년(2017년~2019년) 간의 사고 현황과 개선조치 후 1년(2021)간의 사고 현황을 비교했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산 입체교차로(IC) 부근 개선 사례는 반면교사가 될 듯 싶다.

진입로 직전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 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경산 IC 부근에선 연평균 4.3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는데 2020년 교차로 전방에 신호기와 교통섬, 도로 노란색 유도선을 설치한 뒤 이듬해 교통 사고 발생 건수는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

산IC 진출로는 당초 우측방향으로 계획됐지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소음 피해·분진·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주민과 전문가·경찰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좌측 방향 진출로로 최종 결정됐다. 도로개설전 운전자가 익숙치 않은 왼쪽 방향 지산IC 진출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쳤을 것인데 개통도 하기전에 논란이 일자 곧바로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이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도로 여건이 다르겠지만 국내 왼쪽 진출로의 위험도(사고 발생) 현황도 제시되는지도 궁금하다. 단체장 교체와 학동과 화정동 건물붕괴참사 발생이라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면 지산IC 진출로 개통은 계획대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역 결과는 최상, 또는 최선의 행정행위를 하는데 기여해야지 '답정너 행정'을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여 시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지산나들목(IC)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너무 얄잡아 보지 말고 선개통후 후조치를 하는 행정을 기대해본다.

이기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